

해외 시험·인증 정보센터 설립

앞으로 수입국의 성능시험·검사·인증 제도에 대한 토털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시험·인증 정보센터'가 설립된다. 또 '산업기술지도'가 연구과제 도출, 연구개발 예산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된다.

신국환 산업지원부장은 지난달 19일 산업기술 시험원에서 개최된 '중소수출업체와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장기술혁신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참석한 수출업체들이 외국 규격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고, 시험평가 장비가 부족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인증을 받아 수출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신장관은 "외국 규격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험·인증 정보센터를 산업기술시험원에 설치해 수출업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어 오후에 방문한 산업기술평가원에 서 미래필요기술의 예측수단인 산업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단백질 제품, 무선통신기기, 전지, 광섬유, 로봇, 디지털 가전의 기술지도는 오는 6월까지 완료기로 하고 초전도, 엔진, 의료공학, 항공우주, 멀티미디어, 자동차 6대분야에 대한 기술지도는 오는 4월부터 신규 작성을 추진기로 했다.

이같은 기술지도가 완성되면 산업기술분야별 기술발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이용해 현재 추진중인 중기거점 및 차세대 신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과제 도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증가 위해 민·관합동 총력 경주

미국경기 침체와 반도체가격 하락, 주변국 수출감소 등의 여파로 인해 수출전망이 험겨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증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총력전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7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신국환 장관을 비롯 외교통상부, 재경부 등 4개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5개 수출지원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9개 업종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입상황 점검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향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신 장관은 "미국경기침체로 인한 인근 국가들의 수출불안이 우리에게 파급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지역별로 총체적인 비상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하고 "올해

통상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새로운 수출전략수립과 업체의 수출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수출확대와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본사보증 제한 완화, 종합상사에 대한 부채비율 지도기준 2백% 예외 적용, 수입규제 및 무역마찰 대응지원, 플랜트수수 정보 및 행정지원, 해외 전시회 파견시 지원 확대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신 장관은 수출보험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수출자금 공급 원활화 도모,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와 함께 플랜트수출협의회 설립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시장개척 역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무역센터에서 1백 20여 수출보험육성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열고 산업역군으로서 수출증진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허기술 사업화 506억 지원키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키 위해 특허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특허기술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창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지난해 377억원 보다 34.2%가 증가한 총 506억원 규모의 '2001년 특허사업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3월 5일 정부가 발표한 특허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에서 55억원을 출연, 특허기술의 연구개발(R&D)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에 바탕을 둔 창업지원으로 신

기술창업보육사업에서 50억원을 출연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에서 50억원을 융자키로 했다.

정부는 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330억원을 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융자·지원하고 특허기술평가, 외국출원비용 보조, 산업재산권 진단을 위한 보조 지원에도 2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자금지원 이외도 특허기술의 원활한 사업화 촉진에 따른 정보제공, 기술·경영지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리·지원기관간의 연계체제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 해외시장 개척요원 120명 파견

올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파견되는 '해외시장 개척요원' 규모가 120명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3일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취업자 등 120명을 5개월간 해외시장에 파견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개척요원은 5월에 창업 및 무역실무 교육을 받고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파견된다. 대상지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주재 60여개 지역이며 주로 신흥유망시장 및 틈새시장이 될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파견지에서 소속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수출거래선 교섭, 유망 창업·수출아이템 발

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파견기간 중에는 파견지역별 물가수준에 따라 월평균 110만원 내외의 체재비 및 시장조사 활동비가 지원되며 왕복 항공료는 별도로 지원된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까지 총 331명을 선발해 세계 미개척 무역신대륙 50여개국 60여개 지역에 해외시장 개척요원을 파견한 결과 총 5,600만달러의 수출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79개 공공기관, 중기제품 39조여원 구매

정부는 연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 79개 공공기관이 총 38조8천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제품(공사·용역포함)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청 등 79개 공공기관의 '2001년도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을 전년도 구매실적 36조6천억원 보다 2조2천억원이 증가한 38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물량의 70.1%(27조2천억원) 상당을 상반기 중에 조기구매토록 하는 '2001년도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이 최근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에 관한 세부정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제공토록 해야하고 단체수의계약품목 및 중소기업간 경

쟁물품은 단체수의계약이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분리구매해야 된다.

이와 함께 NT(New Technology), EM(Excellent Machine·Mechanism·Material), KT(Korean Technology) 및 특허제품 등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선 구매해야 하며 입찰시 수급현황, 원·부자재가격, 인건비 등을 감안해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구매실적 점검 등을 통해 구매 독려에 나서는 한편 매월 실적을 파악해 국무회의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매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구매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민관 산업정책 협의체제 구성

산업자원부는 산업정책 수립·시행을 활발히 하기 위해 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광두 서강대교수)산하에 민관 산업정책 협의체제를 구성, 운영한다.

산자부는 신국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회 산하에 전자상거래부문 등 14개 기능별·업종별 분과위 구성을 완료, 상시적인 민관 산업정책 협의체제를 발족키로 했다.

산업발전심의회는 민관 산업정책 협의체제로 전자상거래 산업정책 중소기업 유통·물류 지

역산업발전 등 5개 기능별 분과위원회와 IT BT 정밀화학 등 3개 신산업분야,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기계 섬유 등 6개 전통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총 1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총 210명의 민간 전문가와의 상시적인 민관 산업정책 협의체널도 마련키로 합의했다.

심의회 주요 토론으로는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나노(10억분의 1미터 굵기의 미세단위)기술 발전전략을 비롯한 ▷21세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적정배치 ▷정보기술 등 올해의 산업시책 등이다.

ISO 인증기관 평가제 도입

품질경영체제(ISO 9000) 인증기관에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ISO 9000 인증제도의 민간이양에 대비, 인증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ISO 9000 인증기관의 심사능력 및 전문성과 성실성을 평가해 우수인증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인증기관 평가를 위해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 내부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인증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1개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평가해 6월 중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시스템 인증제도인 ISO 9000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ISO 9000 인증기관들의 인증심사능력, 성실성 등 경영정보를 파악한 후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증기관을 선택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ISO 9000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인증비용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했으나 향후 우수인증기관의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인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기관들은 기관 자체의 능력제고를 위해 인적투자 등 인증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3년 도입된 ISO 9000 인증제도는 현재 31개 인증기관에서 1만3천여건의 인증을 하는 등 매년 평균 229%의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산자부는 1월 30일 27개 인증기관대표가 참석한 인증기관장협의회에서 ISO 9000 우수인증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인증기관 대표들도 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중기 기술애로 해결 위해 산·학·연 지원 확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 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66.7% 늘인 3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대학, 연구기관등 175개 컨소시엄을 통해 2천300여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사업의 전문화와 내실화, 질적 도약을 유도키 위해 지역별 컨소시엄규모의 상한제를 운영하고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종합적 기술지원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기관 등에 의한 과제공모제를 운영하고 지

역단위의 컨소시엄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컨소시엄사업의 사후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참여기업의 만족도와 목표달성도 조사, 관리기관의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평가 등 다면적 평가체제를 구축,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컨소시엄 선정과 사업비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컨소시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역내 공동애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과제 도출을 적극 유도하고 개발사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과제당 최저사업비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연구개발인력과 설비 등 기술개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과 지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사업이다.

조달청, 올해 중전기기 1,278억 정부조달 확정

변압기·발전기·전선·계측기기·승강기·조명 기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올해 정부 수주 물량이

확정 발표됐다.

조달청이 확정 공고한 2001년도 정부조달물품 구매계획에 의하면 발전기·변압기·UPS 등 중전기 품목은 국제입찰을 포함 총 1,388억원으로 주요 품목중 구매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동제어반 569억원, 등기구·조명기기 320억7,000만원, 승강기 276억6,000만원, 계측기기 91억8,000만원, 전선 48억7,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1,388억원을 구매하는 중전기기는 주요 공공기관 물량 중 110억원을 국제입찰로 구매하며 일반내자로 구매하는 UPS·배전반·발전기·변압기 등 대부분의 해당품목을 전기조합을 통해 단체수의

계약한다. 단체수의계약 품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전반으로 1,000억원이 책정됐으며 오는 6월까지 전체물량의 70%를 선구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동제어반은 올해 구매물량의 40%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국제입찰로 구매하며 대부분의 물량을 단체수의계약하지 않고 조달청 등록업체간 공개입찰로 진행한다. 276억6,000만원을 구매하는 승강기 역시 전체 물량의 50%를 국제입찰로 구매하며 내자물량에 한해 조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한다.

등기구·조명기기는 320억7000만원 전액을 등기구조합과 조명조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한다.

중기 정책자금 지원계획 확정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들어갔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융자) 규모는 구조개선자금 7천500억원,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소상공인 창업자금 포함) 4천억원 등을 포함, 총 10개자금 2조1천639억원 규모로 지난해 2조403억원보다 6%(약 1,200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정부는 최근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중 65% 수준인 1조4,000억원을 상반기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식기반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기업과 IT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주의 직접대출이 확대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과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동일 업체당 통합 지원한도(50억원)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대출과의 차별성을 확보, 수출금융과 개발기술사업화 등 정책우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책자금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따른 기업활동위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대출금리를 낮추어 자금이용업체의 금리부담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국회와 중소기업계,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정책자금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실시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정책 자금 지원체계평가용역과 자금지원기업 사후관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정책 자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는데 먼저 정책자금

대출심사과정의 중복심사를 해소했다.

또 신용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강화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과 정책자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된다.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입시다.

